

# 인사 청탁에 압수물 절도까지...경찰 부패·기강 해이 질타

## 전남경찰청 국감 현장

국정감사에서 승진 인사 금품청탁, 압수물 절도, 불법체류자 도주 등 전남경찰청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마을주민 10여명이 장에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송치(2023년 3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한 경찰의 수사원칙 위배도 도마에 올랐다.

21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남경찰의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브로커에게 승진을 청탁해 구속된 '승진 인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장은 국민과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연말 인사 시기가 다가온다.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이 압수된 물품에 손을 댄 공직기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 역시 "완도경찰 경찰관이 압수된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4년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허술한 증거물 관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증거물 조작, 도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 압송된 불법체류자 도주하고 장애인 성폭행 사건 부적절 수사 도서지역 치안 공백 지적도 모상모 청장 "엄정 대처할 것"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6일 지난 16일에는 나주경찰도 압송된 불법체류자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붙잡혔지만 도주했던 10시간 동안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모상모 전남경찰청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진행 중이다. 지적에 공감하며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성범죄 장애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전남경찰의 수사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시 권익 보호기관에 통보하고, 조사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영상 녹화를 하는 수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접수된 순천 발달장애인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다른 정황과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면담 한 번으로 내려진 불송치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한 장흥의 한 마을에서 주민 13명이 한 명의 발달장애인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

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거론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진술을 하도록 해 진술 오염을 유도하고,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청장은 "수사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 인권을 준수해가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도서지역 치안 공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동만 의원은 "전남지역에 1999개 유인도에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해결이나 민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도 전남경찰은 이 지역에 출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중심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에서는 읍면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읍면단속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모 청장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 활동을 벌이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도서지킴이를 선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대답했다.



21일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상모 전남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제의 판결

### 속제 안한 조카, 파리채로 발바닥 때렸다면 광주지법 "훈육 해당"... 1심 선고유예→2심 무죄

'속제를 하지 않았다'며 친모에게 허락을 받고 파리채로 조카의 발바닥을 때렸다면 아동학대일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께 자신의 집에서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하고 발바닥을 5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카 모친의 승낙을 받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 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다른 교육적 대체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이 속제를 하지 않고 계인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훈육 목적에서 체벌을 했고, 피해 아동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벌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다른 교육적 대체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월단체, 5·18 편휘 책 발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사과 촉구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5·18 편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발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에게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5·18 역사를 왜곡·편향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

졌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도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발간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로, 도서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문구가 실렸다.

단체는 "문제의 도서는 주말까지 홈페이지 발간물에 열람됐다"고 현재 첨부파일이 삭제됐다. 이 과정

에서 홈페이지에서 삭제 이유를 공지하거나 사과나 설명은 일절 없었다"며 "박물관은 공개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구체적인 역사왜곡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을 맡고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사유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산사태 안전조치 방치해 주민 사망...건설업자 2심도 금고형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주택에 있는 70대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자와 토목설계사가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토목설계업체인 B사와 토목설계사 C(31)씨에 대해서도 1심이 각각 선고한 벌금 700만

원과 1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6일 광양시 한 마을 인근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와 C씨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받을 수 있게 공사 현장 경사도를 고의로 조작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산사태로 공사현장 경사로 흩더미가 무너져 내려면서 주택 2채와 창고 1동이 매몰되고, 창고 2동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여·79)가 매몰돼 숨졌다.

A씨는 설계도면에 따라 석축 하부에 기초 콘크

리트를 설치하고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수해에 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와 C씨는 공사현장 평균경사도가 23.2도이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52.3%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평균경사도를 22.1도로 조작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사고가 A씨의 과실 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성추행 혐의 피소된 광주지역 대학교수 직위해제

광주지역 한 대학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돼 직위 해제됐다.

21일 광주지역 모 대학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경찰에서 A교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광주광역시경찰은 지난달 A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2건으로 각각 다른 여성

이 A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해당 대학 학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곧바로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김디인 기자 kdi@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